

자조금제도의 입법방향을 바로 잡아



성 정 표
(본회 울산울주지부장)

'80년대를 마무리 하고, '90년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체제의 개혁과 시장경제의 개방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시장개방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그동안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생산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유통·소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없이 지속적인 농축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에 점차 격화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압력과 일부 품목의 수입개방으로 말미암아 축산업계의 기반은 근저에서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89년 4·8수입개방 예시계획의 발표와 '89년 10월 26일 GATT국채수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GATT 18조 B항을 졸업하게 되고, 유예기간이 8년으로 결정됨으로 인하여 농축산물 전품목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러한 심각한 국내외 여건속에서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축산물의 수입개방을 저지 또는 지연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면서, 한편으로는 생산성의 향상과 시장성의 제고,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축산업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 강력한 생산자 단체의 건설이 선행되면서,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자금의 조성이 필수적 요건이라 하겠다. 자금은 생산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초로 하여 수혜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부담이 적고 자금조성이 공평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양돈협회가 주축이 된 축산단체들의 자조금제도의 입법화 활동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에 삽입시켜 제도화 했다. 그동안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이해부족으로 인해 다소의 시각차이는 없지 않았으나, 축산물의 성장발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소비자의 기호성에 맞춰 소비계층의 확보 및 소비량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축산물의 영양적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연구와 신제품 개발,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조사 등은 축산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조금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다.

그러나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자조금에 관한 시행령(안)을 보면, 그 내용중에 지금까지 정부가 해오고 있는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수매비축 등을 포함시키고 있어 도무지 정부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자조금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시장가격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아진 얼마 안되는 자조금으로 어떻게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수매비축까지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모아진 자조금의 50% 정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하

지만 도저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상은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정책의 실패 등을 생산자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자조금 실제의 목적인 소비촉진·연구조사·신제품 개발 및 교육·정책개발 등을 수행케 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경쟁력을 키우고, 공동관심사를 생산자 단체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해결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강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 단체를 지원해 줘야 한다.

또 조직과 재정면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축협은 축산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꾀하며, 취약한 생산 기반의 안정을 위해 기술 및 재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사료공장의 증설과 품질개선을 통해 생산비의 절감을 유도해야 한다. 또 불안정한 유통의 체계를 조직과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량의 축산물 소비지역에 축산물공판장의 개설과 축산물 수출과 가공육 생산을 위해 초현대식 시설의 대규모 가공공장의 건립, 또 최근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지역조합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여 산업공해로부터 국토와 환경의 보존에 앞장서면서 축산인들로 하여금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축협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생산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유대를 통해 업계의 공동관심사 해결에 능동적이어야 하며, 제도개선과 예산의 확대지원으로 개방화시대에 축산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축협은 협동조합 설립 본래의 목적대로 축산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의 지원확대, 사료공장의 증설과 품질개선, 축산물공판장의 개설, 현대화된 가공공장의 건립 등을 통해 축산물 제품에 관한 한 축협 고유의 상표를 통해 국내 축산물 유통의 현대화 주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축종별 생산자 단체인 협회는 전국적인 조직과 자조금의 운영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연구조사, 소비홍보, 신제품 개발, 정책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안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요약하면, 정부는 제도의 개선과 예산의 지원을 담당하고, 축협은 고유의 상표로 유통을 개선 장악하고, 협회는 자조금의 운영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다원화된 사회의 기능대로 정부·축협·협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제기능을 다해야 한다. 이미 개방계획이 발표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역할 분담으로 제기능을 발휘한다면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 사향이 있다 하겠다. **■**

자조금은 생산자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의 목적인 소비촉진사업·연구조사·신제품 개발 및 교육·정책개발 등을 수행케 하여 생산자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정부는 지원해 줘야 한다.